

격화하는 경제 위기와
변혁적 대안

▶ 8~9면

동아시아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정

▶ 5면

아랍 혁명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0면

노동자 투쟁
금속, MBC, 쌍용,
전교조 ...

▶ 6, 7, 14, 16면

최병성 목사 기고
재앙으로 돌아 오는
4대강 사업

▶ 12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8

Left21.com

제85호 | 2012년 7월 9일 ~ 7월 22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한일 군사협정 추진 끝없는 비리 · 부패 복지 공격과 긴축 추진

몸통이 제거돼야 한다

▶ 관련기사 3 · 4 · 5면

... 박근혜도 함께!



화물연대처럼 싸우고 승리하자

▶ 관련기사 6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말일까요?

“이래서 ‘녹색’성장이구나.”
한 네티즌,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생긴 낙동강 사진을 보며

“[일본]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
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
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
협하다.”
한일 군사협정을 주도한 김태호

“[이명박 아들] 시형 씨가 낸 서면답
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들어맞아 소
환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 어렵하시겠지.

“이석기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립
싱크했다.”
흥분하는 우파 네티즌

“납편이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싫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경총 조사부장 황인철의
노동시간 단축 반대 근거

“해적’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본 적
이 있느냐.”
김지운 씨를 수사한 경찰의
황당 질문

“중북좌파 세력을 거세하면 나라가
안전해지고 질서가 잡히며, 개혁이
이뤄져 부패가 일소되고, 경제가 성
장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률
이 낮아지며,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극우 조갑제의 놀라운 ‘중북’ 환원론

“어느 시대건 깨끗하게 돈 버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논설실장
정규재가 대변한 자본가들의 본심

“피파과를 얼마나 다녀야 얼굴이 저
렇게 두꺼워지나.”
한 네티즌,
히딩크 방한 행사에서
나경원이 주인공 행세를 하는 걸 보고

“이명박이 형제들과 달리 ‘일본 혈
통’일 수 있다.”
오죽하면 제기되는
이명박의 ‘출생 의혹’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7월 23일)

강남역 11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간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격주 화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7월 24일)

홍대입구역 8번과 2번 출구
인천 주안역 2번 출구
울산 현대차 4공장구 정문 건너편 6시 45~8시 40분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풀무칠(성균관 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김지운 경찰 소환

김지운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지운 씨의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향린교회 조현정 목사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 기자회견에서 김지운 씨는 “해군 당국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기관이 비판의 성역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고소고발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짓을 이명박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해 온 조현정牧사는 “여러차례 기자회견에 참가했지만 오늘처럼 자랑스럽고 몇몇한 경우가 없었다”하며 김지운 씨를 방어했다. “해적이 뭍니까?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해적입니다.” 김지운 씨와 지지자들의 강력한 항의와 당당한 태도에 경찰은 부담감을 느낀 듯했다. 경찰관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김지운 씨는 목버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경찰 수사에 당당히 맞섰다.

한미일 동맹

최근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 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수사하기로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반대운동을 위한 모금을 ‘불법 기부금품 모집’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균 마을회장은 “지난해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56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았는데 이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김지운 씨 등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경찰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잔인하게 공격해 온 당사자다. 검찰은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덮어주며 최악의 불신을 받고 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 양승태는 용산 참사 판결에서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팽개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권력자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대중



7월 5일 김지운 경찰 수사 항의 기자회견. 한일 군사 협정 날치기 시도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동전의 앞뒤면이다.

국 포위망의 일부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서 발사돼)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D 체계를 갖추고 싶어했는데 제후도가 그 최적의 요충지로 여겨져 왔다. 이 MD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일 정부 사이의 군사 협정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한일군사협정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자칫 휘발유에 불을 붙이듯 대중운동을 촉발해서 자신들의 이런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 최근 ‘제2의

쫓불이 일어날까봐’ 한일 군사협정 추진을 연기한 것도 이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굽힘없이 건설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김지운 씨를 방어하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고리다. 강정마을 주민 2백7명을 비롯해 1백여 개 단체가 연명하고 3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가한 7월 5일 기자회견은 이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그 점에서 수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 소환 등 수사 자체가 탄압

인데다 ‘MB 심부름센터’ 검찰에게 ‘공정’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지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일환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김지운 씨를 방어해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좌절시키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

정호중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력난을 핑계로 곧 재가동에 착수할 듯하다. 고리1호기는 지난 2월 모든 냉각장치의 전원이 차단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를 낼 뻔한 뒤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안전 점검은 하청업체 직원 몇 명에게 내맡겨져 있었고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폐했다. 핵발전소 같은 위험 시설에 저질 부품을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이익을 챙긴 체계적인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다. 설사 이런 문제들이 없었더라도 고리1호기는 언제든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애당초 핵발전소 자체가 ‘안전’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핵발전소와 신월성 핵발전소에서도 최근 거듭 고장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조사한 2011년 자료를 봐도,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고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많다. 게다가 고리1호기는 설계 당시 수명인 30년을 넘겨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시한폭탄 수준의 고리1호기 재가동으로도 모자라 그 옆에 신고리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대량의 전기를 멀리 송전하기 위한 초대형 송전탑이 필요한데 정부는 고압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도 잔인하게 짓밟고 있다.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이 항의하며 분신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에 매달리는 까닭은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쏟아부어 대량의 전기를 기업들에 공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고리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고, 핵발전을 풍력·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정호중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진보적인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자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7월 5~9일 런던에서 주최하는 ‘맑시즘 2012’ 행사에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노동자 연대 다함께’의 자매 조직이다.) 영국 ‘맑시즘 2012’ 조직자인 조셉 추나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겪는 자본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 이후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가디언〉인터뷰에서 말했다. 실제로 영국 ‘맑시즘 2012’의 등록자

수는 첫날인 7월 5일에 이미 4천5백 명이 넘어 1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체제가 상위 1퍼센트의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급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2012’가 7월 26~29일에 고려대에서 열린다. 12년째 열리는 ‘맑시즘’은 한국 최대의 진보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로 ‘맑시즘2012’에 많은 노동자·청년·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참가할 예정이다.

강동훈



7월 5일 영국 맑시즘2012 개막식 수천 명이 몰려들어 ‘마르크스주의의 귀환’을 보여 준다.

사진 제공 Geoff Dexter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김문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 내용은 19대 국회의 앞날이 뻔할 뻔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는’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 심사’ 하자고 합의하면서 국회를 연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돈을 주고 당원명부를 입수해 당선한 의원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자들에겐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양 당이 나머지 합의 사항 — 불법 사찰과 각종 권력형 비리에 관한 국정 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 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언제나처럼 몰타기와 시간끌기 속에 청문회·국정조사의 알맹이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가 ‘이명박 거수기 국회’였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과반인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국화로 굴러갈 것이다. 무엇보다 ‘종박주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종북’ 마녀사냥의 웅변대회장으로 만들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대선을 의식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코스프레’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 캠프에는 전경련 부회장을 지내며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헌법 제119조 2항 삭제제를 주장한 ‘삼성팬’ 현명관을 영입했다.

19대 국회 첫 입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들 중 사내하도급법은 ‘불법 사내하청 합법화 법’, ‘불법 사찰 금지법’은 ‘사찰 합법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만적인 엉터리 법이다. 새누리당 뒤편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도청한 한선교가 내정됐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명박도 7월 2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앞두고 국가기구가 단합할 것과 ‘재정 긴축’ 기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다음날 정부는 허점투성이 ‘무상보육’ 정책조차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계 5단체는 5월 말부터 국회 당선자 1백여 명을 초청해 축하 리셉션을 열며 친재벌 정책을 당부했고, 최근엔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진 이명박

‘친박’ 국회가 기층의 분위기와 괴리될수록 정치 양극화는 거리의 행동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 리더십 캠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속에 ‘친재벌 본좌당’이 과반을 차지한 19대 국회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립서비스에 그치고 개악과 고통전가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독립

이처럼 우파 정책 거수기 국회가 다시 4년 동안 반복될 조짐 속에서 민주당은 이것을 막을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번 개원 합의 자체가 민주당의 궤죄죄함을 보여 줬다.

민주당은 이명박 측근 비리, 불법사찰, MBC 파업 등 많은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분명한 양보를 무엇 하나도 받아내

지 못한 채 이석기·김재원 의원 자격심사만 합의하며 국회로 기어 들어갔다. 4대강 청문회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각종 개발 이권이 걸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야당이란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던 17대 국회 때도 민주당은 늘 우파의 반대를 핑계로 개혁 입법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도리어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때 온갖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막상 총선이 끝나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 중요 총선 공약조차 반영되지 않은”(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법안을 발의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진보정당의 약화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진보적 대중의 기대를 모으며 약진했지만, 그 뒤 자중지란에 빠져 마녀사냥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마저 이 지경인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1퍼센트를 위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국회’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식 정치와 기층의 분위기가 괴리되면, 그동안 진행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정치적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18대 총선 이후 국회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오히려 대중이 촛불운동으로 분노를 표현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때와 달리 대선이 코앞에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최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투쟁은 이런 ‘아래로부터’ 대중투쟁만이 반동적인 새누리당과 오락가락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들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이런 투쟁 건설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힘을 만회하고 정치적 대안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이상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검찰은 내국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다.

이런 검찰이 ‘만사형통’을 건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부도덕한 정권’이 처한 레임덕의 깊이를 보여 준다.

물론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총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박의 BBK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바로 그 자다. 검찰이 박지원 쪽을 치는 것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의 대선자금 수사로 몰타기를 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 볼 수는 없다. 그동안 내국동 사저 의혹, 청와대 불법 사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은 모두 내부자의 폭로 때문에 드러났을 뿐, 정작 검찰은 덮기에만 급급했다.

탄핵을 당해도 진작에 당했어야 할 정권이 여태 버틴 것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와 이명박이 협조하고 검찰과 사법부, 조중동이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 결정적 위기 때마다 반MB 진영의 구명인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워낙

복마전이고 분노가 커, 더는 ‘괴리자르고 덮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집권 우파는 이석기·김재원 국회 자격심사와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귀국을 계기로 다시금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모든 부패·비리의 핵심 몸통을 가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김종인·이상돈 등을 다시 앞세우며 ‘경제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사실 박근혜의 보심은 얼마 전의 ‘국가관 검증’ 발언에 담겨져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은 ‘박근혜 시대’의 예고편이다.

올초에는 서울 은평구에 세금 2백억원이 들어간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됐고, 기념관 홍보물은 “뜻깊은 관람으로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자]”고 하고 있다.

이처럼 ‘올드보이’와 ‘올드패션’이 득세하는 ‘박근혜당’이 19대 국회를 개원하면

서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

박근혜 측근 모임 7인회 소속의 김용환, 최병렬, 안병훈, 김용갑, 김기춘 등은 모두 <조선일보>와 육사, 검찰 출신들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권력 핵심부에서 명명거리고 지냈던 자들이다.

박근혜의 대선 캠프에는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펴낸 박효종 같은 자가 포함됐다.

총호

박근혜는 육영수가 사망한 스물두 살 때부터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박근혜가 총재를 맡으며 시작한 ‘새마음[갯기]운동’은 박정희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서 이름을 본따고 박정희가 지시한 국민정화운동의 일환이었다.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 궤기대회를 열고 박근혜가 사열을 받으며 훈화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충은 국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그 복됨은 우리 전체에 보다 큰 행복을 나누어 줄 것[이고] ... 총호 사상은 물질만능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를 총호와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드는 박근혜의 국가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아예 관계가 없다.

바로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 뒤에는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1퍼센트 어둠의 세력이 모여드는 것이다.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이 두 마디 말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낙관적 전망이 줄을 이었다. 이번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유로존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감내할 만큼 체력이 튼튼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역설적이게도 이 말도 이미 지난 4월 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언급했다). 지난 7월 2일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전국공업활동지수가 5월의 53.5에서 6월에는 49.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지배자들도 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전염되자 부랴부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규제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이전 최고치인 2008년의 92.1퍼센트보다 4.8퍼센트포인트나 높은 96.9퍼센트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1년 3분기에는 21.4퍼센트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9.0퍼센트, 올 1분기에는 3.0퍼센트로 급감하고 있다.

불안한 경기전망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2012년 5월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0.8퍼센트, 전년 동기 대비 1.5퍼센트 감소했다.

하우스 푸어

한국 경제가 수출입 급감을 내수 확대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민간소비를 가능하는 할인점 매출액의 경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크게 둔화했다.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들로 는 비정규직 증대, 일자리 정체 등이 있



사진 이원우

위태로운 한국 경제 속에서 빗더미에 갇힌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계부채의 증가다. 2011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9백12조 원에 이르렀는데, 1999년 말 2백13조 원에 견줘 7백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부터 12년 동안 명목 경제성장률 7.1퍼센트보다 가계부채 증가율(12.9퍼센트)이 더 높았다. 가계소득의 증가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의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백50퍼센트에 육박하며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20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백58조 원 가운데 60퍼센트 정도인

5백2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중에서 1백조 원 정도가 올해 만기가 된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이 한창 고조될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샀던 상당수 가구들이 ‘하우스 푸어’로 지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에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등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정책은 2008년 미국과 최근 스페인, 1990년대 일본 등 여러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이다.

거품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은행, 자산투기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이득을 봤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기 위해,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위해, 또는 큰 병에 걸려서 목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빗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품 붕괴를 방지한다며 대책은 부자·기업들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꾸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흡혈귀처럼 달려들어 죽을 때까지 돈을 갚으라고 쪼아 대고 있다.

긴축

둘째, 정부는 부자 퍼주기를 위해 쓴 돈 때문에 정부의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긴축을 추진하며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은 긴축 기조로 짜여졌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0~2세) 무상보육 조차 후퇴시키려 한다. 연간 6천억 원 정도 드는 추가 비용이 없다지만 최근 정부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구입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난 1년 사이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도 했다. 올해 초에도 밀양의 한 장애인 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셋째,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고삐를 죄면서 노동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KTX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우리은행 등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KT는 민영화한 이후에 노동자가 6만 5천 명에서 3만 7천 명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이렇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은 모두 위기를 봉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부

가계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들과 함께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해 주는 비율이 90퍼센트에 이르렀고,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비중이 80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런데 세계경제와 이와 연동된 한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 최근에 분명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고, 제1금융권도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금회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체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자동차나 반도체 또는 휴대폰 등의 수출 호황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 호조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 국내적 불안 요인들까지 더 심각해지는 게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이지만 이윤이 줄어들고 심각하면 기업이 파산하는 등 지배자들에게도 큰 고통이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지배자들이 쓰는 전통적인 수법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 즉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늘리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지배계급의 행보에 맞서 우리 계급도 정치적·조직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기업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복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얻은 부채를 탕감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히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지난 몇 년간 사상 초유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은 상반기 영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2퍼센트나 늘었다. 현대차도 상반기에 무려 9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이런 돈을 노동자들의 삶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를 막아내고, 이런 요구들을 성취하려면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투쟁과 성과는 지배계급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정선영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장미순 참보육실현을위한전국부모연합 회원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

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당장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중단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1퍼센트만을 대변해 온 이명박 정부는 무상급식 논란 때 그랬듯이, 보편

적 복지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과연 재벌가 자손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거나 하는가.

정부가 재벌가 운운하는 상위 30퍼센트에는 평범한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로 집 한 채 갖고 있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하위 70퍼센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천정부지로 공

공요금과 물가가 치솟고 가계대출로 한숨이 끊일 날 없이 고단한 노동자들은 ‘선별 지원 검토’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전면 무상보육 약속을 걷어차고 하위 70퍼센트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며, 99퍼센트를 향한 공격이다. 진보진영과 노동자들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상위 1퍼센트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면

전면 무상보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비해 복지 시스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정부의 무상보육 후퇴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한일 군사협정

“뺏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뺏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는 여러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거나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적”이라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옹호하는 주장들을 해 왔다.

한국과 일본이 서둘러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MD)와 관련이 깊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이 협정은] 한·미·일 삼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6월 21일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에 함께 참가한 3국의 해군 함정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미해군

또한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일 군사협정 등을 지렛대 삼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좀더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 맞물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더 확장하려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의 배후에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희망해 왔다.

‘2011년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보 관계를 증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적 안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향은 중국의 반발을 낳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명백하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잠재적 위험”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고 비난했다.

“뺏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과, 그보다 언제나 한 수 위인 박근혜는 한일 군사협정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일 군사협정을 비판한 민주통합당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MD 구축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협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려는 한·미·일 지배자들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김영익

맑시즘2012MARXISM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 참가 신청·문익는 16면을 참조하세요.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 — 동아시아는 어디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 **제주 해군기지 — 안보를 위해 평화는 파괴돼도 되는가**
조약골 평화운동가 & 김지윤 <레프트21> 기자 (일명 '고대녀')

일본 현지의 목소리

또 다른 후쿠시마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

6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핵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사회복지 행동네트워크의 후미히토 이토가 이 소식을 전한다.

오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결정에 반대해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오이 원자로를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 내리고 방사능이 대기로 유출된 이래 처음으로 재가동하는 원자로다.

이 시위는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반대 시위 이후 가장 커다란 규모로 열린 시위 중 하나였다.

6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위대는 “더 이상 후쿠시마 사고를 만들지 마라”,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하고 외쳤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자로 재가동 결정이 비민주적이고, 지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는 완전히 정당하다.

국가사고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오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려 한다. 대중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일본의 상당수 핵발전소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건설돼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지 않았고, 정치적 부패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경찰과 조사단은 이 범죄 행위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대



이번 시위는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시위 중 하나다.

사진 출처 Yuchi Koso (틀리커)

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공공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당수 식품들이 심각하게 오염됐고, 제대로 된 식품안전 검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까지도 여성과 아이들이 후쿠시마 주변의 오염 지역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들을 피난 시키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시로 야부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오염된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이전과 달랐다. 이 시위는 사회 정의와 연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계급’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풀뿌리 운동

이 주도했다. 시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건강을 위협 받는 이들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시위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배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자 노다 총리는 의회에서 “의회 바깥에 있는 커다란 외침이 나에게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핵발전소 재가동 결정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고, 오이 발전소에 접근하는 시위대를 폭동 진압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았다.

지금 일본 정치인들은 대중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 노다 정권은 엄청난 대중 [의 힘]이 폭발해 자신을 타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0호 / 번역 최용찬

일본 정치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일본 의회에서 소비세 인상이나 통과된 이후, 오자와 이치로 그룹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 반대하며 집권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조만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후퇴를 거듭해 배신감만 안겨 줬다.

예컨대, 민주당은 미국 ‘일방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후텐바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서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겠다’던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의 기동력을 강화(‘동적방위력’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적극 호응해 왔다.

최근 일본 의회는 ‘원자력 기본법’ 개정으로 원자력을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지배계급의 ‘핵 야욕’도 공식화했다. 동시에 우주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우주기구법도 개정했다.

얼마 전 일본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고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 같은 복지 정책도 모두 후퇴했다. 그러면서 정작 집권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소비세 인상은 실현시켰다. 소비세 인상은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률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판 긴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는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법인세 인하로 부자·기업들에게는 선물을 안겼다.

이런 배신적 정책들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멸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정치

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 사고가 낳은 사회적 위기도 양극화를 더한층 심화시키는 구실을 했다.

양극화의 오른쪽 측면은 공공연히 핵무장을 주장하는 우익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당에 대한 환멸(과대언 없음)이 하시모토 도루와 같은 극우 정치인의 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시모토 도루는 원전 재가동과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등 포퓰리즘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에 파고드는 것이다.

‘하틀러’

그러나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할 것은 강제한다. 스스로없이 “지금 일본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지독히도 반노동자적이다. 그래서 ‘하틀러’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우익의 부상과 공식 정치의 우경화의 다른 한편에서 대중의 급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도쿄에서는 오이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해 15만 명이 대중 시위를 벌였다. 1960년대 초 미일안보조약 반대 투쟁 이래 수십만 명 규모의 대중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다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도 등장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핵무장·군사대국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일본 우익에 반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반핵 평화운동이 성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이들이 더 급진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 민중의 투쟁에 연대하는 소중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현주

현대차 투쟁

‘3년 무쟁의’를 뚫고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자

허수영 노동자연대 다함께 울산사회 활동가

현대차지부가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결의했다. 지부는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사측과 우파 언론은 역계제도 현대차 지부의 이런 파업 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 일정에 따른 파업 수순”이라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쟁의와 금속노조의 파업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도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심야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사측과 우파 언론들은 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파업”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들이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역겹다.

재벌들이 우파 정치인들에게 뒤통내고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언론들도 정치적인 매한가지다. 그래서 올해 언론 노동자들이 MB의 언론 장악에 맞서 투쟁했던 것 아닌가.

현대차 노동자들의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는 금속노조 뿐 아니라, 심야노동과 비정규직에 고통받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차 투쟁이 승리하려면 정치적으로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결, 기아차와의 공동 투쟁, 다른 부문 노동자와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트집과 비난

사측과 우파 언론이 “정치 파업”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현대차 투쟁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현대차는 현재 한국 수출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3년 무쟁의”의 겨울을 지나 파업을 준비하는 것이 진저리치게 싫은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비난에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강력하게 싸우는 것일 테다.

한편, ‘현장혁신연대’ 등 일부 우파 ‘현장 조직’도 지부의 파업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함께하는 것

은 “현장 조합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현대·기아차 공동 투쟁은 “기아차에 유리한 지형만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첫째, 금속노조의 파업이 왜 현대차 현장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주간연속2교대제나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충분한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정취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따라서 금속노조 파업에 함께하는 것은 이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근육을 단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속노조 파업이 성공적으로 벌어진다면, 이것은 현대차 투쟁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현대차 노동자가 금속노조의 다른 부품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내걸고 파업하는 것은 보수 언론과 정부의 “귀족노조” 운운하는 헛소리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결

셋째, 하나의 적에 맞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운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무할 일이지,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현대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의 절박하고 정당한 3대 핵심요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타결 시점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요한 의제들을 정취하려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최대한 밀어붙일 수 있는 데까지 투쟁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에서도 우리 측이 먼저 양보하거나 굽히고 들어가는는 안 될 것이다.

‘3무 원칙’(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화 없는)은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협상 결과를 보면 지부 지도부가 “생산량 만회를 위한 노동강도 강화” 수용 등 후퇴하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싸워 보지도 않고 후퇴를 모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열망을 비껴가는 것이다.

게다가 사측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6월 13일 금속 노동자대회에서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자들

정규직지부의 요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된다면 우리 힘이 약화된다. 분열과 분리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정규직지부

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지부 지도부가 2년 미만 비정규직 1천5백64명 계약 해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옳았지만 적극

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3대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뒷받침하는 실천과 투쟁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현대차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에 맞서 비정규직지회가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려는 계획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생산 라인에 비정규직 대신 단기 직원 계약직을 투입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즉, 공정분리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7월 1일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공정분리와 전환배치에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최근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1퍼센트의 높은 찬성률(투표율 86퍼센트)로 쟁의를 결의했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이런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지지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고, 현 시기에 중요한 원·하청 공동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 활동가들이 ‘가칭’ 원하청공동투쟁실천단’을 제안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 결의 지지”를 선언한 것은 모범적이다. 1공장 정규직 대의원회는 7월 5일에 직원 계약직 투입에 항의해 30분 정도 라인을 멈추기도 했다!

이런 힘을 확대해 나가며, 7월 21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2주년을 맞아 열

리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도 금속노조가 책임성 있게 집회 조직에 나서야 하고, 특히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대규모 집단 계약 해지, 공정분리, 전환배치에 맞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100만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7월 21일(토) ~ 7월 22일(일)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정부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운송료 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돌입 5일째인 6월 30일에 운임료 9.9퍼센트 인상을 받아내며 마무리됐다.

화물연대 파업은 ‘종북’ 마녀사냥 속에서 사내하도급반 개악, 인천공항 민영화 등의 계획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던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을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레임덕의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허약한 처지에 있는지 잘 보여 줬다. 이것은 7월~8월 투쟁을 준비하는 금속노조 등에도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더 자세한 평가는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

이번 파업 돌입과 동시에 의왕기지 인근 교통탐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에게 평가를 들어 봤다.

“화물연대 파업은 민주노총 6월 ‘경고 파업’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탄압 운운했지만, 대화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의왕기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70퍼센트 이상이 마비됐습니다. 평택항은 조합원이 1백40명인데 7백34대가 멈췄어요. 평택항 기능이 거의 마비됐고요. 부

산에서도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높아졌고, 2009년 대규모 탄압 이후에 다소 위축된 조직력도 복구됐습니다.

화주들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도 파업 이후에 노조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요. 평택

항의 한 상조회는 40~50명이 집단가입하는 총회를 준비 중이고요. 동두천에서도 24명이 집단가입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표준운임료 법제화가 되면 비조합원들이 대거 화물연대로 가입할 거예요.

파업 후 사측의 공격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진성물류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명을 계약해지 하려 했으나, 우리의 투쟁에 밀려 계약해지를 곧바로 철회하고 오히려 단체협상까지 체결해야 했습니다.

보복성 계약해지를 하거나 합의한 9.9퍼센트 운송료 인상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애초 파업의 목적은 표준운임제 정취였습니다. 민주당이 법제화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죠.

물론,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9월 국회에서 표준운임제가 법제화되도록 계속 싸울 것입니다. 2라운드가 시

작되는 것이죠.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에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탬 것입니다.

만약 올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우리는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우리는 정권을 흔드는 투쟁을 했고,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앞장서 싸웠습니다. 누가 되든 화물연대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뒤집어엎을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 기조도 바뀌고, 진보 세력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상대방 한 쪽 코에 코피가 났습니다. 이제 금속노조가 바통을 이어 받아 8월에 확실하게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해 준 ‘노동자 연대 다함께’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정리 강철규

MBC 파업

‘김재철 퇴진설’을 진정한 승리로 굳히려면

‘8월 김재철 퇴진설’이 흘러나오면서, MBC 파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말 시작된 MBC 파업은 무려 6개월째 투쟁 대열과 지지를 확대하며 김재철과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김재철이 수십 명을 해고·징계하고 1백9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는 MBC 노동자들의 투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온갖 비리와 노조 탄압의 대명사가 된 김재철을 구속하라는 서명에는 한 달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파업은 대규모 광고 손실로 이어졌고, 7월 말 런던 올림픽 방송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생겼다.

무엇보다 MBC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우파와 새누리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8월 방문진 이사회 교체 때 김재철이 퇴진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남경필, 이상돈, 이재오 등은 “김재철이 용퇴 안 하면 8월에 해임할 것”이라고 했다.

우파의 분열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국회 원구성 협상 합의문에는 ‘김재철 퇴진’이 빠져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김재철 퇴진] 합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장담했던 국정조사·청문회조차 파내지 못했다.

이 속에서 김재철은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재철 퇴진을 기정사실



6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김재철 헌정콘서트 —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빗속에서도 수천 명이 참가해 여전한 파업 지지 분위기를 보여 줬다.

화하며 ‘이제 복귀해서 현장 투쟁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선볼려 보인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뒤통수 칠 수 있으니, 김재철이 확실히 퇴진하는 것을 보고 복귀하자’는 노동자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 MBC 조합원의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라

고 한다.

더구나 설사 여야 합의로 8월에 김재철이 쫓겨나더라도, 그가 추진해 온 온갖 악행들 — 기자 계약직화, 예능·드라마 전면 외주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강화, 대규모 인사 개편, 지방 방

송사 구조조정 등 — 을 되돌리고 “공정방송”을 위한 민주적 개혁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다.

MBC 사장이 선정되는 구조의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는 여전히 정부·여

당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이들은 또다시 낙하산 사장을 앉힐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처럼, 진보진영 인사들이 방문진 이사회에 대거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보도국장 직선제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 조처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김재철 퇴진’으로 표상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강제하고 ‘친박 낙하산’을 막기 위해서도 투쟁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우파의 분열이 커지는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다. 시민들의 ‘밥차 응원’, MBC 파업 지지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에서 보듯, 여론의 압도적 지지와 연대 움직임도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반값게도, 부산일보 노조가 방문진 이사회 교체 시기인 8월에 정수장학회 문제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전량을 갖고 노조 탄압을 진두지휘해 왔다. 정수장학회는 MBC의 지분 30퍼센트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를 폭로하며 더 압박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언론 파업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 온 박근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8월에는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투쟁도 예정돼 있다. 지금 같은 때 MBC 노동자들이 좀더 투쟁을 지속·확대해 나간다면, 이미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를 실질화해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최영준

일제고사 항의 행동으로 투쟁의 자신감을 키우다

박태현 전교조 경기 시흥지회 조합원

지난 6월 26일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이날 전교조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무려 2천2백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교 앞 1인 시위를 조직했고 교과부의 징계 위협에도 전국적으로 교사 수백 명이 조퇴를 하고 일제고사 폐지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민원 접수에는 교사 1만 명 이상이 연서명을 했다. 그리고 6월 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폭로하고 일제고사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다양한 항의행동을 했다. 이는 전교조 교사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일제고사 반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투쟁이었다. 영국과 일본에 이어서 프랑스는 내년부터 일제고사가 없어질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일제고사 폐지 청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1백72개국 3천만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IEA)에서도 “26일 치르는 한국의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에 미치



6월 26일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한 필자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강력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그런 가운데 나와 ‘노동자 연대 다함께’ 교사 동지들 역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의 일부가 됐다. 일제고사 폐

지 투쟁을 어떻게 건설할지 회의하고 이에 기초해 각 학교에서 할 실천, 전교조 지회, 지부 등과 협력할 사항을 정했다. 일제고사 항의 행동의 Q&A를 작성해 공유하고 카톡 채팅방과 전화로 일상적으로 토론하면서 26일 당일에 조퇴 투쟁 사유는 어떻게 할지, 교장·교감이 방해할 하면 어떻게 할지 등 서로 궁금함을 해소했다. 또 학교 내에서 충분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일제고사 선전물을 만들면 그것을 함께 공유해 학교에 여러 차례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교사들의 노련함과 젊은 교사들의 패기와 활력이 어우러졌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자극받으면서 투쟁의 자신감을 높였다. 이것은 교과부의 징계 위협과 학교의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1인 시위와 조퇴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뿐 아니다. 다함께의 회원들은 26일 학교 앞 1인 시위에 38명이나 자원해서 교사 동지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우리 학교 앞에서는 나의 1인 시위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고 한 일부 과격한 부장들

이 있었는데, 우리 회원들이 함께해 줬기에 안정적으로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날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1인 시위 끝낼 즈음 학부모회원 30여 명이 몰려왔다. 그들은 내 수업 태도를 문제 삼고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에 항의한 것을 학생 선동이라고 비난하며 나를 전출시키라는 민원 연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감동적인 일

그러나 이 시도는 보기 좋게 좌절됐다. 내가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지키자’는 글을 써서 SNS로 퍼 나르기 시작했다. 놀라게도 그 글은 하루 만에 전교생의 절반에 가까운 5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감’을 눌러 줬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천 명도 넘는 학생들이 그 글을 공유해 줬다.

나를 징계했다가는 학교가 발각 뒤집힐 거란 압력을 느낀 교장은 학부모들을 진정시켜야 했고, 학부모들 역시 나에 대

한 민원을 백지화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그간 전교조의 일부 활동가들은 이번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통해서 (일제고사의 폐지 등) ‘언을 것보다’ (징계 등의) ‘잃을 것’이 많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내 경험을 비롯한 전교조의 이번 투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투쟁에 참여하면서, 페이스북 등에서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감을 높였다.

이제는 조퇴 투쟁에 대한 정부의 징계에 대응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징계 추진이 있는 곳은 충북 지역의 교사 4명밖에 없지만, 각급 학교에서 조퇴투쟁을 한 조합원들의 기록을 남기는 등 징계 밀착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징계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어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학교가 진정으로 인성과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투쟁한 동료 교사들을 함께 방어하자. 그리하여 이 투쟁이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았던 기억으로, 이후 투쟁의 든든한 자신감으로 될 수 있게 하자.



맑시즘2012MARXISM에서

노동운동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 참가 신청·문의는 16면을 참조하세요.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한가 | 7월 27일(금) 10:00~11:30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 비정규직과 자본의 노동 분할 — 노동자 연대의 실마리 찾기
장규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 패널 토론 | 쌍용차 투쟁 :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7월 28일(토) 19:00~20:30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정진우 쌍용차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 패널 토론 |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박설 (레프트21) 기자 &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 ‘금속노동자의 힘’ 비대위 의장

그리스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쓴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SEK) 당원이며, 주요 반자본주의 시위와 유럽사회포럼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활동가다.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는 7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그리스와 유럽의 위기와 저항, 대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은 다퓀트와 유로존 탈퇴에 반대할 때 벌어질 사태를 언급하며 사람들을 겁주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도움 없이 그리스는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 국가는 돈이 떨어질 것이고 임금과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다. 수입도 중단될 것이므로 상품의 진열대도 텅 빌 것이고 사람들은 굶어야 할 것이다. 주유소에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는 옛 통화인 δρα크마가 다시 사용될 것이며, 드라크마의 가치는 즉각 폭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축한 돈을 잃을 것이고 임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들은 흔히 많은 숫자와 표들로 구성된 “과학적 연구”나 “특별 조사”로 뒷받침된다.

이런 연구들이 어찌구무가 없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래 물가상승률이 20.1퍼센트나 20.3퍼센트나 아니라 정확히 20.2퍼센트라는 식이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불과 3년 전에 코앞에 들어닥친 위기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자들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현재 그리스 실업률은 20.9퍼센트에 달한다. 그리스의 경제는 2011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예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7퍼센트 성장했다. 이것은 그리스의 다퓀트와 유로존 탈퇴의 결과 아니다. 그리스를 추위와 어둠으로 몰아넣은 것은 오히려 ‘구제’ 계획이었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의 주장이 문제인 것은 단지 그들의 예측이 어설퍼서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트로이카의 도움 없이 그리스 국가가 임금과 연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지금까지 그리스는 트로이카로부터 7백3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 한 푼도 연금이나 임금 지불에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2011년 그리스가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그리스, 유럽과 국제 은행들에게 지불한 돈은 6백30억 유로를 넘는다.

그리스가 채권자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 시장을 이용할 지 못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빈곤과 굶주림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리스 경제는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광물 산업과 수출로는 수입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입 중 일부는 노동계급과 빈민들의 소비와 연관이 없다. 예컨대, 2011년 그리스 경제는 40억 유로를 선박 수입에 사용했다. 그러나 수입된 선박들 중 대다수는 유조선이다. 유조선들은 선박 소유주들의 배를 불러



사진 출처: Jane Rasmussen (로이터)

주는 투자하겠지만 국고를 채우는 데는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는다. 만약 선박값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트로이카의 도움 없이 그리스 국가가 임금과 연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지금까지 그리스는 트로이카로부터 7백3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 한 푼도 연금이나 임금 지불에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2011년 그리스가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그리스, 유럽과 국제 은행들에게 지불한 돈은 6백30억 유로를 넘는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곡물과 설량도 수입해야 할 처지라고 한탄을 한다. 이것도 황당한 주장이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곡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더 그렇다. 이 자들은 그리스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비교우위’를 가진 일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그리스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 성공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에도 2010년에 그리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 중 하나였다.

이 성공의 기원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방은 냉전에서 승리했고 그리스의 북쪽 이웃 국가들(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은 패배한 동방 진영에 속해 있었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을 보았다.

1990년대에 그리스 지배자들은 발칸 국가들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 은행 지

점들을 열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선박 소유주 중 한 명인 야니스 라치스는 하부아침에 은행가가 됐다. 그의 은행인 유로뱅크는 이제 발칸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다. 그리스 지배계급은 대박이 터졌다. 특히 2002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후에 그리스 경제는 호황을 겪었다. 당시 그리스 성장률은 이탈리아나 독일의 두세 배에 달했다.

거품이 터지다

그러나 이 기적은 투기와 거품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현 그리스 부채 위기는 이 거품이 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발칸 반도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서브프라임에 비견할 만한 악성 부채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 코스타스 카라만리스의 우익 정부는 국제 위기로부터 은행 부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백80억 유로를 은행들에 지원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3월호 / 번역 김용욱

맑시즘2012MARXISM에서 연설할 주제

- ▶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7월 27일(금) 16:10~18:00
- ▶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와 저항 | 7월 28일(토) 16:10~18:00
- ▶ 오늘날 개혁과 혁명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회과 공동 발표 | 7월 29일(토) 16:20~18:40

근본적인 문제들을 남겨 둔 새 유로존 협약

안디야 바티차리아 영국 사회주의자

6월 마지막 주에 유럽연합 정상들은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유로존의 구제 기금들을 사용해 휘청대는 스페인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유로존의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 내에 설치되는 단일 감독 기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 협약으로 유로존을 조각날 듯하던 금융 위기는 잠시나마 진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 위기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처음에 이 합의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수혜를 입는 반면 독일은 손해를 보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합의안 문구로 보자면 독일 자본은 추가 지원으로 악성 부채를 떠안게 된다. 그러나 합의문 곳곳에는 새 구제금융안이 몇 차례의 은행 위기 때만 적용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단일 감독 기구가 설립되면 독일이 주도하는 채권국들은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늘리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감독 기구를 운영할 것이다.

자금 투입

유럽 최대 구제 기금인 4천억 파운드 규모의 유로안정화 기구(EFSM)는 7월에 출범한다. 협약에 따라 유로안정화 기구는 스페인 은행들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고 이탈리아 국제 매입에 나서게 된다.

지금까지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 기금들은 스페인 정부를 거쳐 투입됐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스페인 은행 신용도에 대한 불신이 스페인 국가의 신용 위기로까지 번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새 협약의 의도는 스페인의 은행 위기가 스페인 국가 부도보다 먼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독일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유로존의 은행들을 직접 통제하고 자신의 이해대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 유럽 은행들이 호황기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엄청난 돈을 대출했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은행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결사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무관한 노동계급 대중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

이후 상황은 이 부채를 탕감하든(유럽 은행들은 이를 한시코 거부한다), 더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스처럼 긴급 정책을 취하든 두 가지 뿐이다. 후자라면 그리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촉발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310호 / 번역 천영록



사진 출처: Jane Rasmussen (로이터)



집이 없어 '닭장 아파트'에 거주하는 홍콩 노동자 2011년 홍콩 자니계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 불안정 속에 중국 민중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 주도 경제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이 덕분에 고속 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이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 때문에 투자도 부진해지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5월에 지난해 동기 대비 20.1퍼센트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상황만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했고, 6월 8일에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낮춘 데 이어 한 달도 채 안 된 7월 6일에 다시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원하는 효과를 내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자본주의의 급속한 축적과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를 낳는 건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모순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310호 / 번역 천영록

중국 경제는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

기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다. 2008년 이전에도 중국은 고도 성장은 지속했으나, 총투자 대비 이윤율은 하락했고 과잉 투자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로 수출이 급감한 게 이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시켰다.

중국 지배관료들은 당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9조 위안을 넘는 돈을 ‘물자’ 대충로 시장에 푸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부분적 회복 덕분에 경제성장률은 다시 10퍼센트를 육박하게 됐다.

그러나 위기는 근본에서 해결될 게 아니었다. 경기는 일시 회복했으나, 대신에 과잉 투자 경험은 더 심해졌다. 물가도 크게 치솟아,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크게 자극했다.

낮은 이윤율 때문에 시장에 새로 유입된 자금의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에 나 몰라라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며 막대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거품을 가라앉히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유로존 위기로 세계경제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본 축적을 유지하려면 경제성장률을 적어도 8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자. 그런 데 주요 선진국 경제가 계속 악화해 수출에 타격을 커진다면,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2008년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과잉

생산, 고물가, 투기를 다시 부추겨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쏟아 부은 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지배자들은 중국 경제를 내수 위주로 전환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다. 내수 확장은 임금 상승을 의미하는데, 생산성이 낮은 중국 하청 제조업체 상당수가 이를 감수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제조업체들에 의존해 지역 경제를 운영하는 관료들도 같은 처지다. 즉, 중국의 ‘수출주도형 모델’은 계급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일이다.

실사 극적으로 내수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낳는 이윤율 하락과 과잉 축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결국 중국 경제의 앞일에 위험한 지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터지거나, 경제성장률이 8퍼센트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은 언제든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치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국 관료 지배 체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지해 통치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자본 축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공공연히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보 시리아 파문 같은 갈등과 분열은 앞으로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대중 저항의 폭발력과 지배층의 분열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 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자본 축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공공연히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보 시리아 파문 같은 갈등과 분열은 앞으로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대중 저항의 폭발력과 지배층의 분열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 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310호 / 번역 천영록

맑시즘2012MARXISM에서 격화되는 경제 위기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 참가 신청·문의는 16일을 참조하십시오.

▶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어디로? | 7월 27일(금) 10:00~11:30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교수

▶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7월 27일(금) 16:10~18:00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SEK) 활동가

▶ 중국 자본주의와 위기

이정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부 연구교수

▶ 금융화와 주주 자본주의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가

강동훈 <레프트2> 경제 담당 기자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앤드루 클라이먼은 미국 페이스대학 교수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일관되게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의 초청으로 6월 중순에 방문한 앤드루 클라이먼을 <레프트2>이 만나 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 등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전문은 <레프트2>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불황이 시작된 지는 4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불황이 단지 금융 위기가 아니라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즉, 몇 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윤을 저하, 그리고 낮은 이윤율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다 보니 투자도 둔화되고, 소득 증가율도 낮아지고, 결국 부채가 크게 불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대공황과 비슷한 극심한 불황이다. 그런 깊은 불황이 도래하면 자본 가치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부실 채권이 손실 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올 텐데, 이런 상황은 원리상으로는 본격적인 호황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파산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자본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이윤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황이 도래하기 전에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도 있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유력한 시나리오는 자본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 온 일, 즉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빚 보증을 해 주고, 기존의 부채를 더 많은 부채로 돌려 막는 식으로 말이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때마다 사회 위기와 금융 위기는 더욱 악화되는 듯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주변국이 아닌 핵심국이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위기의 여파도 극저위지 않고 일반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채권자들과 금융시장의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저들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와는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바로 아랍 혁명과 월가 점거 운동, 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격변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에서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포기한 많은 좌파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나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를 대안으로 여긴다.

마르크스는 그런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자본> 3권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미래상을 훨씬 보여 주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존속하는 한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디까지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은 모든 자본가들을 옥죄었다. 이런 압력은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세 가지에서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커다란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주류 정치 세력들의 해결책이 무엇 하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매우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다수 좌파들은 사회 변혁을 포기한 탓에 자본주의에 이면저면 성형 수술을 가해 서 좀 더 정의를 만들어 보려 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길을 열어줄 심상이다. 1930년 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화론도 미국의 경우에는 맞지



사진 출처: Jane Rasmussen (로이터)

않는다. 금융화론자들은 이윤이 실물 투자가 아닌 금융 투기가 배당금 지급 등의 용도로 세간하 결과로 축적률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윤을 재투자하는 것 말고도 기업들이 투자에 쓸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 주는 산업이 금융화 시대에 크게 성장했다. 기업의 배당금 지급 액수와 증권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도 차입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생산적 투자의 하락을 설명해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나 금융화가 아니라 이윤율이다.

대불황 시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는 압도 다수 인구에게 이익이 안됐고 앞으로도 이익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말은 스탈린주의 등에 의해 공적화돼 왜곡된 용어인 만큼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여야 한다. ‘민주적’이라 함은 직접 생산자들이 권력을 지닌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실, 가게, 농장 노동자 등등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에서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포기한 많은 좌파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나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를 대안으로 여긴다.

마르크스는 그런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자본> 3권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미래상을 훨씬 보여 주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존속하는 한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디까지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은 모든 자본가들을 옥죄었다. 이런 압력은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세 가지에서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커다란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주류 정치 세력들의 해결책이 무엇 하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매우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다수 좌파들은 사회 변혁을 포기한 탓에 자본주의에 이면저면 성형 수술을 가해 서 좀 더 정의를 만들어 보려 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길을 열어줄 심상이다. 1930년 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화론도 미국의 경우에는 맞지

인터뷰 제공한: 천영록 / 녹취·번역 천영록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이슬람주의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이슬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이슬람주의를 단지 보수반동적, 과거 회귀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다. <한겨레> 등 자유주의자들이 대표적이지만 일부 좌파도 공유한다. <한겨레>는 이집트 대선을 두고 “내용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사실상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이 거의 차이가 없는 듯 묘사했다.

이런 관점은 대통령으로 군부가 지원하는 사피크가 되든 무슬림형제단이 되든 상관없다면서 방관하거나, 혁명이 다 끝난 듯한 비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집트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사피크의 당선은 광폭한 반혁명 책동에 녹색등을 켜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주의를 피지배계급의 진보적, 반제국주의적 운동으로만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의 실천적 결론은 이슬람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다. 예컨대 일부 좌파는 2009년 이란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궤멸하면서 운동을 탄압하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지지했다.

이런 두 가지 오류는 이슬람주의의 계급적 성격과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슬람주의는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슬람 사회를 재건해서 해결하자는 정치 신조다. 이슬람주의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충격에 상처받은 사회에서 등장했다.

1757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벵골 지역을 장악한 이래 서구 열강들은 이슬람 세계를 체계적으로 지배·수탈·억압했다.

제국주의에 상처받은 사회

제국주의의 지배와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슬람 세계의 모든 사회 세력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옛 지배계급의 일부는 몰락했지만 제국주의와 결탁한 다른 일부는 막대한 부를 쌓고 서구식 생활을 즐기게 됐다. 일부 농민은 농업 자본가로 변모해 성공했지만,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전전하는 빈민이 됐다.

이슬람주의는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결탁한 토착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등장하고 성장했다. 따라서 이슬람주의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대 산업과 현대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슬람 사회 재건은 부조리가 만연한 현재 사회를 이슬람의 정신에 맞게 개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모순된 이데올로기만으로 이슬람주의를 판단하는 것은 협소하다. 핵심적으로는 이슬람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주의자들의 계급적 구성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아랍 세계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신중간계급과 학생들이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제국주의와 이들에 협조적인 토착 엘리트들 때문에 자신들의 야망이 좌절됐다고 느꼈다. 이슬람주의는 이 프티부르주아지의 열망을 주로 대변한 것이다.

특히 학생 출신 실업자들은 대학 밖의 불만 가득한 수많은 청년들과의 연결 통로가 됐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정



사진 출처 Zaneb Mohamed (틀리거)

무르시 당선을 기뻐하며 거리로 나온 이집트 민중 이슬람주의의 모순적 성격 때문에 무르시는 옛 군부와 기층 민중 사이에서 동요할 것이고, 혁명을 낳은 조건이 지속될 것이다.

부가 손 놓고 있던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빈민들 사이에서 이슬람주의의 사상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가 처음부터 아랍 저항운동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것은 아니다. 세속적 좌파들(아랍 민족주의자들과 공산당)의 무능이 이슬람주의의 성장과 큰 관련이 있었다.

예컨대, 이집트에서 이슬람주의 운동이 처음 발전한 것은 약 1920년대 말 하산 알 반나가 무슬림형제단을 창설하면서였다. 그때는 세속적 민족주의 정당인 와프드당이 영국의 이집트 지배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던 때였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는 대중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계급·국가 들에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속주의, 이슬람의 '정숙' 관념을 지키지 않는 여성, 좌파, 소수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도 맞서 싸우며 반동적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

또한, 이슬람주의는 급진적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존 질서를 공격하면서도 프티부르주아지와 사적 소유 원칙 자체를 위협하는 일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이런 이슬람주의의 모순적 성격은 핵심 활동가들의 계급적 기반에서 비롯한다. 프티부르주아지 계급은 일관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모순적 성격

이슬람주의의 모순적 성격은 '이슬람 사회 재건'이라는 목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주요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종교적 관행들을 부활시키는 것만을 뜻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은 위기를 이용해 옛 지배계급과 거래해서 그들이 '이슬람 가치들'을 시행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전망은 특정 종류의 이슬람주의를 지지하는 기존 사회 집단, 청년기에는

급진 이슬람주의자였으나 이제는 신분 상승에 성공한 사람들의 욕구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학생들이나 학생 출신 대중, 도시 빈민가에서 그들과 뒤섞여 사는 농민 출신 대중의 열망에는 맞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은 무슬림형제단은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편에서는 군부가 옛 질서를 수복하려는 압력을 넣을 것이고, 대중은 여러 개혁을 시행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형제단은 갈팡질팡할 것이다. 심지어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군부와 더 손 잡으며 운동을 단속하려 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체제 자체에 강력히 도전하지 않는 한 무슬림형제단은 자기 지지자를 포함한 대중의 개혁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리라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무슬림형제단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긴장이 조성될 것이고, 그런 긴장은 지지자

들 사이의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이런 모순들을 이용해서, 더 좌경적인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주의 사상과 조직에 충성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차승일

추천 도서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값 4,900원

이집트 현지의 목소리

“노동자들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사진 출처 이집트혁명

올해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노동자들 노동계급은 혁명 심화의 핵심 열쇠다.

사메 나기브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RS)의 지도적 활동가

이집트의 신임 대통령 모하메드 무르시는 화장실을 갈 때도 군부의 원수 탄타 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주도권은 최고군사위원회(SCAF)가 계속 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각성했기 때문에 구정권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

따라서 혁명의 가능성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열려 있다.

어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이든 군부든 별 차이가 없는 지배세력이라고 여긴다. 분명히 그 둘의 강령을 계급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과 군부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무슬림형

제단은 대중적 기반이 있고 이를 통해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반면에 군부는 보안기구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상층과 하층의 각기 다른 압력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동요한다.

우리는 이 모순을 활용해야 한다.

청중

무슬림형제단의 기층 회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은 좌파의 청중이다. 그들은 혁명의 참가자이기도 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RS)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과 군부가 전투를 벌일 때, 우리는 바리케이드의 한쪽 편에 이슬람주의자들과 함께 선다. 우리는 거기

서 독자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비판을 결코 삼가지 않는다.

오늘날 이집트에는 무슬림형제단과 군부 둘 다 지지하지 않으면서 혁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대한 청중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 사이에서 그렇다.

청년들은 광장을 가득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다. 총파업은 이집트 전체가 멈춰 서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집트 노동자들과 대중에게 '만일 군부가 승리하면 이들이 노동자 조직을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군부는 혁명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대중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309호 / 번역 김중환

시리아 학살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출신 중동 전문가로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1.2》(책갈피)의 공저자다.

시리아군이 터기 전투기를 격추한 일을 계기로 시리아 혁명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 시리아 조종사가 요르단으로 망명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터키는 나토 가맹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번 일의 배후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서방 세력은 이를 시리아 혁명에 개입할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

나토는 이미 이번 일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혁명이 수세에 몰렸을 적에는 외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리아에서도 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알레포, 다마스쿠스에서도 매일 대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파업도 확산하고 있다.

또 지난주에는 반군들이 바브 아르와 흡스에 잠입해 지난 2월 정부군이 점령한 군기지 세 곳을 함락했다.

현재 정권은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엘주르 지방과 북부의 알레포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정권이 남부의 데라 지역과 흡스와 하마 인근의 마을과 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지도 오래됐다.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군은 현재 매우 조직적이고, 무기와 탄약도 공급 받고 있다.

이 무기들 대부분은 걸프 국가들이 조건부로 보낸 것들이다.

그러나 반군들은 대체로 외부 세력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지원과 연계된] 이슬람주의 그룹들이 교전 지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변적 존재다. 주요 혁명 조직들은 자주적 혁명을 옹호하고 있다.

서방이 선호하는 해결책인 “예멘식”

권력 이양은 혁명 세력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

서방과 그 동맹국들이 이러한 “타협”을 강제하려면 혁명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서방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무기 공급이다.

무기와 탄약 문제를 겪으면서 반란군은 탈영병을 획득하는 데 주력했다.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정부군은 반군의 이러한 새로운 전술 때문에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믿을 만한 병력이 거의 없어진 정권은 공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한 조종사가 자신의 전투기를 몰고 탈주했고 다른 사람들도 기지를 버리고 떠났다.

정권은 끊임없이 전투 헬기를 띄워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한 공격도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군들은 헬기 조종사들이 고의로 표적을 빗맞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력 균형은 정권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아사드의 군사적 해결책은 처음과는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아사드의 군대는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의 지지 기반은 움츠러들고 있다.

그러나 나토 회의의 결과는 진군하고 있는 반란 세력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09호 / 번역 김승현



사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COG) 혁명당중앙위원회 (시리아 혁명)

6월 29일 시리아 이德利브 지역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민중의 자주적 저항이야말로 시리아 혁명을 성공시킬 결정적 힘이다.

아사드와의 거국 정부 구성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항 세력들은 국제연합(UN)이 추진 중인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담에서 UN은 과도 “거국” 정부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 거국 정부에는 저

항 세력의 대표들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 인물들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아사드 자신도 자리를 보전할 권리를 갖길 바란다.

UN은 이러한 개입의 목적이 “무수한 목숨을 구하고 국제 사회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국제 회담은 장래에 누가 시리아를 통제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싸움의 일부다. 서방은 혁명을 도둑질하고 아사드를 대신할 정부를 자기들 뜻대로 구성하고자 한다.

시리아 저항 세력 투사인 하이탐 말레흐는 아사드 정권 인물들과 정부를 같이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몹시 불쾌해

했다. 말레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시리아 민중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있는지 보지 못한 겁니까?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나라가 파괴됐는데, 우리보고 바로 그 살인자들과 한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까?”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10호 / 번역 정중수

광둥성 농민공 저항에서 드러난 것

6월 25일 광둥성에서 터진 농민공 시위는 중국 경제가 불안정에 빠져든 가운데 벌어지는 중국 민중의 수많은 저항 중 하나였다. 이 사태는 현지 치안 요원이 중산시에서 농민공 소년을 심하게 구타한 게 발단이었다.

분노한 농민공들이 지방정부 청사를 포위하면서 항의가 시작됐고, 이웃 지역의 농민공들까지 합세하면서 삼시간에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이 지역의 농민공들이 평소 애용인 율분을 지역 정부와 경찰을 향해 터뜨렸던 것이다.

현지 공안당국은 즉시 비상계엄에 들어갔고, 진압 병력 1만여 명을 동원해 이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5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지난해 광둥성 쟁청 시에서도 치안 요원이 슈퍼마켓 바깥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성 농민공을 폭행해, 1만 명이 거리로 나와 경찰 건물을 공격하고 무장 차량을 불지르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때도 공안당국의 탄압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1백 명 이상이 다쳤다.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탄압에도,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 때문에 곳곳에서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에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40만 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광저우 시에서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파업들이 있었다. 즉 “소요 사태” 외에도 농민들의 저항, 노동자 투쟁, 소수민족 반란 등 중국 곳곳에서 다양한 투쟁들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이 저항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부의 양극화, 부정부패, 노동조건 후퇴 등)

이라는 근본 원인은 똑같다.

이제 사람들이 시위 소식을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참가를 호소하는 일은 중국에서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다. 신세대 농민공들이 중국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부상해, 경험에서 배우며 투쟁 전술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이 덕분에 “파업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앞으로도 난관은 계속 있겠지만 경제 위기로 노동자 투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농민공은 누구인가

농민공들은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농촌 청년들은 가난에 찌든 고향을 등진 채 상하이에서 홍콩까지 이어지는 연안 지역의 신흥 도시들로 몰려들었다. 농민공들은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서방으로 수출할 각종 소비재를 생산해 왔다.

오늘날 농민공은 중국 전역에서 2억 명이 넘고, 광둥성의 경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는 농민의 도시 이주는 허용하지만 거주권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교육, 의료, 복지 문제로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처럼, 제대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이 농민공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 농민공들의 저항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 각종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 지배관료 사이에서도 농민공

들에게 거주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농민공 차별과 저임금 체제가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개혁은 더디다. 호구제 개혁으로 농민공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여기에 써야 하는 점도 지배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처럼 이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자란 신세대 농민공들은 현재 강력한 노동계급 집단으로 가장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들은 주로 수출 산업에 집중돼 있어 파업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젊은 농민공들은 최근 여러 파업들을 주도했고, 이제 파업은 이들에게 “일상적 문화가 됐다.” 또한 1989년 톈안먼 항쟁 패배의 경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기도 하다.

이들의 투쟁이 앞으로 핵심 전략 산업의 국영 노동자들을 자극해 투쟁에 나서게 할 가능성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김영익

기고 | 최병성 목사의 4대강 사업 돌아보기

나 다시 흘러가리라

최병성 목사, 《강은 살아있다》(황소걸음) 저자

길고 긴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뭄을 통해 4대강에 가득 채워 놓은 물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MB표 4대강 사업이 가뭄엔 아무 쓸모없었지만, 4대강 사업이 완성됐으니 홍수 피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홍수를 부르는 물 폭탄을 만든 재앙에 불과합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은 서로 반대되는 목적사업입니다. 가뭄을 대비하려면 물을 가득 채워야하고, 홍수를 대비하려면 물을 비워 뒀야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엔 16개 MB표 괴물댐마다 물이 가득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보에 물이 가득한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홍수라는 재앙뿐입니다. 애초에 ‘가뭄과 홍수 대비’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출발 구조에서부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방송에서 “낙동강은 하상이 올라와서(강바닥이 높아져서) 홍수가 나면 전체 물이 그냥 홍수가 나버린다”며 강바닥에 쌓인 모래를 준설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강에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넘쳐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모래가 쌓여 있던 높이보다 평균 2미터나 더 높게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해본다면, “원래 강바닥 보다 2미터나 더 높게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홍수가 나면 전체 물이 그냥 대홍수 재앙이 된다”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오늘, 낙동강 제1비경이던 경천대의 금빛 모래 역시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지금이라도 눈과 발으로 넘칠 듯 썩은 물만 가득 고여 있습니다. 경천대는 은빛 백사장과 기암절벽이 어울린 절경이었는데, 모래 사라지고 썩은 물만 가득한 경천대가 여전히 아름다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후손들에게



2009년 9월 7일에 촬영한 경천대(위)와 2012년 6월에 촬영한 사진(가운데) 모래톱이 사라지고 인근 농지도 홍수에 취약해졌다. 맨 아래는 최근 가뭄으로 말라버린 4대강 인근 저수지.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비경들을 훼손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세계 유산이 되는 이 시대에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국토파괴 범죄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도 녹색, 저기도 녹색으로 변해가는 4대강입니다. 22조 원을 혼자 다 쓰기가 미안해서 국민들에게 녹차라떼를 나눠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지금 4대강에서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조 핀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면 간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생성됩니다. 새파랗게 썩어가는 4대강 녹차라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강 여의도 샛강공원에 ‘인천 앞바다 만조 시 한강물이 들어나면 도로가 침수되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인천 앞바다의 만조와 겹치면 한강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기 때문에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어느 날, 만조와 겹치게 되면 4대강 하류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홍수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측과 상상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런 사실입니다.

아직 4대강을 살릴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을 배경으로 《톱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거침없이 흐르는 강을 길들일 수 없다. 이리로 흘러라, 저리로 흘러라 하며 복종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헐어 갈대와 물풀이 자라는 범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입니다.

F. 피어스는 《강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강을 아무리 넓고 곧게 만들어도, 강물이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리 제방을 높게 쌓아도 이 모든 노력을 조롱이라도 하듯 홍수는 계속 일어났다. 미시시피강(미국)으로 부터 다뉴브 강(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거쳐 흑해로 들어가는 유럽 제2의 강)에 이르기 까지 홍수 없는 미래를 실현한 강은 없었다. 제방은 가장 악한 연결고리나 다름없었고, 자연은 어김없이 그런 곳을

찾아냈다.”며 홍수 예방에 실패한 세계의 하천 역사를 통해 홍수예방을 빙자한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대강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을 다시 회복할 희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흘러 온 강은 앞으로 또 다시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가야 할 생명의 강입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수명은 기껏해야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흘러야 할 강의 시간이 끝없음을 기억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변종운하를 아무리 튼튼히 완공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MB표 4대강 변종운하는 강의 긴 역사 중에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뮌헨시는 1백50년 전에 운하로 만들었던 이자강을 모래톱과 여울이 있는 자연의 강으로 되돌렸습니다. 스위스의 투어강과 미국의 키시미강 역시 운하로 파괴된 강을 자연의 강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운하에서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 독일 이자강과 스위스 투어강은 변종운하로 파괴된 4대강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1백 년 넘게 유지되었던 운하도 생명의 강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4대강 변종운하 역시 생명 가득한 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홍수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만 해주면 강은 홍수를 반복하며 다시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4대강이 파괴되는 재앙을 막아내지 못한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강을 흐르게 한다면 4대강은 또 다시 생명 가득한 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 흉물스런 16개의 괴물 댐을 후손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넘겨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됐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가 교과부에 청원해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관심을 표한 덕분에 국내 언론들도 앓다튀 보도했고, 한국 사회 또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 탓인지 교진추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만 보면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진보 진영은 이 사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화론에 대한 창조론의 반격이라는 표면 뒤에는 더 근본적인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원을 주도한 이광원 교진추 회장의 발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화론의 본래 성격은 유물론이다.

사람의 정신도 물질 현상이라고 보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된다. 물질은 순환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도 죄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낙태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다.”(〈사사인〉 247호)

즉, 유물론에 대한 공격이 교진추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 사회에서 전개된 것과 유사하게 창조론에 지적설계(생물계의 복잡성과 치밀함은 도저히 우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적존재’에 의한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라는 어설픈 과학적 외파를 입혀 어떻게든 링 위에 올려 볼 심산인 것이다(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원은 실제로 꾸준히 지적설계를 주장해 왔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이 유물론의 결정체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윈이 그의 비밀 노트에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동시대에 라마르크, 월

러스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전개했지만 결국 “다윈의” 진화론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가 손톱만큼도 신이 개입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자연사를 설명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종의 기원》을 접한 마르크스는 바로 “역사 속의 계급투쟁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단속평형설

이후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다윈의 진화론은 더욱 단단해졌는데, 특히 스티븐 제이 굴드의 구실이 컸다. 그는 번이가 “점진적으로 축적”돼 종이 변한다는 다윈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생물종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특정 조건에서 짧은 시간에 획기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단속평형설”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던 화석의 불규칙적인 발견에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며, 진화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이런 굴드를 교진추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끌어다 썼으니 굴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굴드는 창조론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설계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으며, 생물학적 결정론인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과도하게 끌고 간 도킨스 등의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비판자이기도 했다.

사실 그가 더 격렬하게 싸웠던 것은 전자가 아니라 다윈의 수혜를 받았으나 과도한 결정론으로 나아간 후자들이었다. 지적설계론이 아무리 과학의 옷을 입고 싸우자고 덤벼도 현대의 “상식”이 다윈이 진화론을 쓰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윈 덕에 신의 손바닥 대신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자연과

인간을 논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윈의 어깨에 올라 더 잘 보이는 망원경을 고르기 바쁜데, 난데없이 지적설계론이 어깨를 두드리며 성가시게 한 상황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이 회방에 넘죽 망원경을 내주고, 다윈의 어깨에 고이 잡든 굴드마저 자기네 편이라고 우기는 망언에도 솔깃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어찌 해외 학자들이 보기에 우습지 않았겠는가.

웁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화론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학계의 자성이 담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운동 진영 역시 다윈의 진화론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결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될 지적설계론에 대한 대응 준비와 더불어 반편향으로 강화될 수 있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경계도 다잡을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김재현·박성환·김어진

통합진보당의 앞길에 깔린 안개가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원칙에 입각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시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실패하고, 노동계 분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또, 서로 계급적 기반이 다른 세력의 통합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부터 있었다.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역대 최대 의석을 얻으며 제3당으로 도약할 때만 해도 기대 속에 이런 우려는 가려졌다.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적 실리도 있었지만, 경제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급진화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경선 부정 파문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국회로 가는 지름길인 당내 경선은 한 달짜리 당원 대거 모집 등으로 처음부터 과열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참여계까지 포함해 모든 정파들이 크고 작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진보의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따라서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런데 구당권파는 이것을 거부했고, 5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급기야 당상 점거와 폭력까지 자행했다. 경선 부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처 방법 때문에도 구당권파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를 조중동과 우파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저들은 대대적이고 역겨운 ‘종북’ 마녀사냥에 나섰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강제로 탈취해 가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끝없는 측근 비리와 레임덕에 허우적대던 이명박에게도 통합진보당 사태는 꽃놀이패였다. 지난 두 달 동안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신문>조차도 통합진보당과 ‘종북’ 관련 기사는 수백 개나 쏟아낸 반면, 내국동, BBK 등을 다룬 것은 몇 건밖에 안될 정도였다. 정부와 우파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으로 진보를 위축·분열시키고, 우파를 결집시키려 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하루빨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보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그러나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당원대책위원회로 나뉘었던 신·구당권파는 진정한 쇄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구당권파는 검찰 탄압이 시작되자 탄압만을 부각하며 경선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 했다. 신당권파의 ‘새로나기’가 우경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쌍용차 22명째 죽음의 행렬. 통합진보당의 실망스런 현실은 진보정당이 해야 할 진정한 구실인 투쟁 고무와 급진적 대안 제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애국가 부르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재검토’ 등 신당권파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신당권파의 일부가 당권 투쟁에 눈이 멀어 조중동에게까지 당원 명부를 넘겼다는 소식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당의 강령을 더 체제 순응적으로 후퇴시키고, 친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정당인 참여당을 끌어들이면서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구당권파였다. 더구나 ‘물지마 야권연대’나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구당권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진보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위기와 우파의 공세에 맞서 독립적인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겠다는 관점이 양측 모두에게서 결여돼 있다.

그러다보니 지도부 선거도 투표 중단과 재투표 사태를 겪으며 거듭 뼈저거리고 있고, 진흙탕 싸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스탈린주의의 문제점

통합진보당의 위기는 자주와 활동가들의 스탈린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보여 줬다. 자주와 경향 활동가들이 당권 유지와 의회 진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의를 지 못한 방법과 수단까지 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스탈린주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곧 계급이 권력에 이르는 것이고, 계급을 대표하는 당이 국가를 장악해 옛 소련이나 북한식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라고 본다. 이때 사회주의는 소련 군대나 관료, 소수 지식인, 계급과 군대, 국회의원 등이 선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되기 위한 대중 행동과 민주주의는 간과되고, 국가 권력에 가까워진다는 목표를 위해 잘못된 수단과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이다.

오직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대중적 행동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성취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믿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정치에 기초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인민전선의 정치적 파산

통합진보당은 스탈린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부르주아 자

유주의 세력이 통합해서 만들어졌다. 정치 전략과 전통이 다른 세력들이 인민전선적으로 통합한 이 불안정한 동거는 처음부터 모순을 품고 있었다. <레프트21>은 진작부터 이 점을 경고했다.

“상이한 계급적 기반에서 비롯된 정치 방침 때문에 수시로 갈등이 표면화될 공산이 크다.”(<레프트21> 70호)

통합진보당 지도자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이 진보·정의·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강령뿐 아니라 정책도 더 온건하게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 속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런 문제점과 모순들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단결해서 더 큰 힘을 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인민전선의 ‘덧셈’ 논리는 현실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정치적 문제점은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했다. ‘종북’ 마녀사냥을 계속하려는 새누리당의 계산과 야권연대를 위해 두 의원을 털고 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대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마녀사냥과 민주당의 타협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검찰은 보수 단체의 고발을 핑계로 공무원, 군인의 통합진보당

가입 여부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신·구당권파는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한 지붕 두 가족’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도부 선거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당권 갈등과 경쟁이 격화하며 신당권파와 구당권파가 계속 충돌을 거듭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 선진 노동자들은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어두운 터널을 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받아 안기에 통합진보당은 너무나 결함이 많다는 것이 이번엔 드러났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면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자 중심성을 바로 세우며,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고취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특정 정파가 패권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각 정파의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허용하며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하면서 차이점을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전·현직 민주노총 리더들이 이런 노동계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 현재의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건설에 참여했던 세력, 그리고 민주노동당 바깥에서 투쟁을 조직해 왔던 모든 진보세력이 이런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석기·김재연 국회 제명 시도와 노수희·범민련 탄압 등 우파의 마녀사냥에는 함께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8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

쌍용차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쌍용차 사측은 최근 “대선 국면과 맞물려 쌍용차 정점이 화두로 부각되면 견집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늘어놨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의 말대로 “정리해고가 사회적 재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연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 좌파 석학 슬라보예 지젝도 대한문을 방문해 “쌍용차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해 싸우는 곳”이라고 연대의 뜻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이 마지못해 ‘무급 휴직자들만이라도 해결하라’고 사측을 압박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결국 사측은 기만적이게도 정적자 24명의 선별 복직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애초 합의대로면 무급 휴직자 4백54명은 2010년에 이미 복직되어야 했다. 이번 대책에는 복직 기약도 없다. 무급 휴직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즉각 복직을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게다가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언급조차 안 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알박한 수작이다.

한편, 민주당도 쌍용차 문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쌍용차 의원모임의 안에는 해고자 복직 요구도 빠져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도 “해고자들도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노동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등이 해고자 복직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왜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전부 뒤집어 써야 하는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정부가 공기업을화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공장 안팎

따라서 진보진영은 정부와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당 은수미와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원 모임’을 주도하는 심상정 의원 등은 해고자 복직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야만 한다.

해고자 복직 관철을 위해서는 운동을 더한층 확대해 정치적 압력을 배가해야 한다. 쌍용차범대위가 지역과 거리 등 기층에서 서명·모금을 확대하고 풀뿌리 단체들의 참여를 호소해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쌍용차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연대 조직에도 힘써야 한다.

쌍용차 투쟁이 정치적 지지를 얻자 공장 내 노동자들도 분위기가 바뀌는 조짐이 있다. 공장 안에는 사측 관리자들과 어울려 해외 관광을 일삼는 지도부 비난 전단지가 뿌려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줄어드는 인원으로 늘어나

물량을 채우느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린다. 지난달에도 엔진공장에서 과로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졌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공장 안 우파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 따르면, “평택공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노사 협상안에 반대표가 더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지부는 10월에 있을 공장 안의 노조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사측에 효과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 연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가 동반할 기업주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 르노삼성 같은 곳에서도 대량해고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쌍용차 투쟁이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급속노조 등이 쌍용차 연대와 '8월 파업'을 잘 연결시키며 투쟁 건설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정종남

쌍용차 투쟁 결의대회

7월 21일(토) 4시 평택역 / 7시 쌍용차 평택 공장 앞
주최 :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6월 16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날'

사진: 김원복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끝까지 싸워 더욱 분명히 정당성을 인정 받겠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에 학생 활동가 7명을 출교해 사회적 비난을 샀다. 출교생들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무려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벌여 학교로 복학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섰다.

출교생 중 5명은 2010년 10월에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법원은 지난 6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前) 출교생 중 3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제까지 고려대 당국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고 치졸하기 짝이 없게 행동했다.

고려대 당국은 2007년에 ‘출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고 그 수준을 퇴학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그런데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2009년에는 당시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까지 이전 징계를 소급해 무기정학으로 기록을 바꿔 버렸다. 그러나 무기정학도 법원에서 무효가 됐

다. 이미 졸업해 학생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무기정학 징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손해배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당국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 버린 1심 판결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검찰·고등법원·대법원의 간부 법조인 출신들을 법률자문위원회로 둔 고려대 재단에 맞서 작지만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출교 징계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삼성 회장 이건희의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투쟁 등 수년간 학생들의 권익과 대학 기업화 저지를 위해 운동을 조직한 활동가들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징계 때문에 2년간 천막 농성을 해야 했고 사회 진출도 늦어졌다. 학교 당국의 마녀사냥과, 끝까지 ‘무기정학’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비교육적인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았다. 학교 당국이 우리의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바꿀 당시 재학생이었다고 해서 이런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래서 대학 당국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하고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자 노력할 것이다.

강영만 고려대 전 출교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



정종남

6월 23일, 더는 참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3일 서울역 광장,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천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황금 같은 주말을 포기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록 한 걸까? 인천의 한 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몸이 쥐난 것처럼 뒤틀리는 증상이 다 있어요. 손가락·젓가락질을 못할 정도예요. 옛날에는 쉬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쉬어도 아파요.”(급식조리원 A 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를 보면, 허리·손목·목 등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는 노동자가 95.8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병가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학교에서는 쉬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 정도는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니 하죠.”(급식조리원 B 씨)

학교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은 다른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미안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78퍼센트)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봐 관리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18퍼센트)보다 훨씬 많다.

운 좋게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처리 방법과 절차가 번거롭고 학교 측 눈치를 봐야 하는 산업재해 신청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림의 떡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미루게 돼 정년으로 퇴직하기 보다는 골병 들어 사직하는 경우가 더 많다.”(암구정초등학교 조리사 박영순)

“우리는 진짜 소모품 같아요. 아프다고 뭐라 하면 나가라고 하죠. 들어올 사람 많다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령처럼 숨어 있어요.”(급식조리원 D 씨)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5만 명이다. 직종만 해도 70여 개가 넘어 그야말로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린다. 그중 6만 3천여 명(42퍼센트)이 학생과 교직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급식실 노동자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무기계약하면 자르기가 쉽드니까 웬만하면 무기계약 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 학비 수당도 주기 싫어서 가급적 애들 다 키운 조리원을 뽑으라고 하죠. 학교에 한마디 하면 근무평가로 불이익을 줘요.”(영양사 C 씨)

“휴. 진짜 어디 밖에 나가서 학교 조리원이란 소리도 못해요. 그냥 알바 다닌다고 해요. 남편한테도 말 못 하는 월급이죠. 요즘 90만 원 급여가 어딴데요. 월급 타는 날은 초라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쟁피해요.”(급식조리원 E 씨)

학생과 교직원이 가장 기다리는 식사 시간을 맛있게 채우고도 “쟁파한 월급”을 받고 자그마음을 굶아 먹힌 채 살아가는 급식실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자는 교육감”이고 “교육감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했음에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교과부의 억지와 인천을 비롯한 상당수 교육청의 교섭 회피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은 월급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살이 계약직 인생을 더는 참지 않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0월경에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전직종 무기계약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면 같은 율타리 안에 있는 교사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가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시화될 때 전교조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연대가 계속될 때 자신의 노동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지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옆 학교에 어떤 여자애는 꿈이 배식원이예요.(웃음) 그걸 꼭 하고 싶대. 너무 부럽다고. 음식 남으면 다 먹을 거 아니냐고. 근데 개가 우리 딸내미 친구예요. 나한테 와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식원을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웃음)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조리원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영양사 C 씨)

조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18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건설노조 파업

화물과 손잡고 건설 현장을 멈춰서 승리하다

건설노조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지난 6월 28일 서울로 집결해 파업을 벌였다.

전국을 뒤흔든 화물연대 파업이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간 건설노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참가 규모도 예상보다 컸다. 비조합원들도 지지하고 동참했다.

전국 현장에서 건설기계 약 22퍼센트가 멈춰 섰고, 주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전국 23개 현장의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합되자 전전긍긍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설노조에 서둘러 양보했다.

정부는 18개 요구안 중 9개 요구를 수용했다.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 중 체불 임금은 임금 지급보 증제도(임금이 체불됐을 때, 우선 보증회사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했고, 적정임금 보장 문제는 노조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보하자 지역에서는 파업이 더욱 확대됐

다. 광주, 울산, 강원, 충북, 대구 등의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 지급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일부 지역은 승리하기도 했다.

6일 동안 파업을 벌인 대구건설지부의 목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쟁취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두 배로 늘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웠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한창 강화하는 시기에 그들과 단결해 승리한 경험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화물연대와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 위기 시기에도 강력하게 싸운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합의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악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발판을 마련해 뒀야 한다.

김은영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

자본가 횡포에 맞서 국제 노동자 연대를 결의하다

지난 6월 18일부터 3일 동안, 수원에서 ‘국제 전자산업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렸다. 근래 전자산업이 빠르게 국제화하면서 전자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역시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맞서 10여 나라의 36개 단체 활동가들이 이번 전략회의에 참가했다.

각 나라의 활동가들이 현황과 투쟁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건 전자산업 자본가들의 횡포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휴대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서도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80퍼센트 이상이 18~25세 여성이고, 대부분 상시적인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90퍼센트의 노동자들이 2년 이하 비정규직이었고, 최근 몇 달 동안 몇몇 여성 노동자가 유산을 경험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11년 동안 전자산업 공장 두 곳이 주민 3만 6천 명 이상이 식수로 사용하는 시아오리 강에 오염 물질을 흘려 보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원인 불명의 각종 질병들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홍콩에서는 GP 배터리에서 근무한 노동자 24명이 유독 물질 때문에 입원하고, 한 명이 신장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전략회의는 전자산업이 여러 나라에 걸쳐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얽혀 있는 만큼, 이에 맞선 투쟁 역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국제 전자산업, 특히 삼성과 애플에 맞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캠페인을 벌이고, 전 세계의 삼성과 애플 공장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서 노동자와 피해자를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전략회의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직언법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건희가 직접 해결하라!” 하는 유가족의 절규에 대부분의 참가자가 눈물을 흘렸다.

이번 전략회의는 어느 나라건 자본가들의 횡포와 노동자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줬다.

박소연

독자토론광장

7월 18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배낭여행을 통한 깨달음

이번 방학엔 맑시즘 2012로 여행을

몇해 전 파키스탄을 여행하던 중에 엄청난 수해 때문에 6일간 고립됐던 경험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파키스탄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고립돼 구조 수송기를 겨우 얻어 타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립된 기간은 오히려 파키스탄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난과 억압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내가 간접적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웠고, 도시 전체의 식료품과 물이 떨어져 함께 구조를 기다리며 가까워서 체했었던 그들은 사회적 착취 굴레 속에 하루하루를 땀땀하듯 살아가고 있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파키스탄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여행한 제3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기술이나 돈을 공수해 오지 않는 이상 노동착취 속에서 피폐한 삶을 견뎌내야 했다.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난다. 우즈베키스탄 젊은 노동자들은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 낮에도 이렇게 이웃끼리 모여 수다나 떠는거야. 이 나쁜 카리모프(우즈베크 대통령)”라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바바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자는지 죽었는지 모를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식수를 찾아 허허벌판을 떠돌아다니는 아낙네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계기로 다음번 여행부터는 ‘사회적’ 테마를 정해 ‘가장 어렵고 낮은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행’을 떠나자 마음먹었다. 방학을 이용해 인도 골짜까 마더하우스에서 봉사하기, 희망버스 또는 강정마을 투쟁 참여하기 등등을 경험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투쟁의 광장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점점 발전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떠났던 여행의 첫 시리즈를 마치고, 현재 나는 다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예전에 배낭을 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멀리멀리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불만의 시발점이 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큰 여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글쎄, 당분간은 이렇게 여행하며 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일단 이번 방학은 맑시즘 2012 포럼을 통해 내 여행의 파를 수혈받을 생각이다.

서지애 전교조 부천 초동지회 조합원

뽕튀기 예산으로 배를 불린 대학들

사립대학들이 뽕튀기·축소 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 지출 항목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실제 결산과의 차액을 늘려 적립금을 쌓아 온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2011년 서울 지역 사립대의 결결산 비교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차액이 무려 1천5백91억 원, 고려대는 6백92억 원, 연세대는 6백11억 원, 성균관대는 5백35억 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 중에 차액이 가장 낮은 한국외대도 그 액수가 무려 54억 원이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만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면 등록금 20퍼센트 인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가, 그래도 학비를 벌여 보려고 과외 등 온갖 아르바이트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들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공분을 살 만하다.

우리는 사립대학들에게 거짓말과 뽕튀기 예산 책정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이선빈 고려대 학생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이하 경여 생략)

안철환 씨는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국가와 자본이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부르주아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국가는 “상부구조”이고 자본은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또 국가와 자본을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면 국가 개념에 계급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 같다.

먼저, 국가를 활용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계급성을 분명히 하려는 안철환 씨의 취지는 완전히 공감한다.

그러나 나는 국가와 자본이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계급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실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총자본’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현실에서 자본은 언제나 다수 자본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가 ‘총자본’의 대변인이라는 개념은 마치 ‘총자본’이 물질적인 실체로서 현실에 존재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또 국가를 단순한 상부구조로 볼 수는 없다. 토대는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경제에 해당하고, 상부구조는 그 토대 위에 자라나는 정치, 법률 등의 현상을 말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상부구조로서 건설이 됐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생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산업화를 계획했듯 말이다. 옛 소련에는 사적 자본가는 없었지만 국가 관료들이 주도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서방 국가와의 무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산업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착취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해서 국가의 계급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계급은 물질적 생산과 착취에 대한 자신의 관계 때문에 다른 인간 집단들에 맞서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봤다. 그런 정의에 비춰 보면 국가를 지배하는 관료들은 착취 체제

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크리스 하먼은 국가를 지배하는 관료

를 “정치적 자본가”라고 분류한 바 있다. 안철환 씨처럼 “부르주아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할 경우 국가는 마치 생산관계의 외부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진다. 국가가 자신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단지 전체 자본의 평균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보서는 국가와 자본이 격렬한 갈등을 벌이는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 국가기구를 통제

한 사람들은 국가기구를 이용해 생산수단을 거의 완전히 국유화했다.

국가와 자본을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이런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안철환 씨의 주장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어 보인다. 안철환 씨는 국가를 이용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데 다른 문단에서는 국가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헤게모니가 바뀐다는

듯한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안철환 씨가 우려한 “국가를 이용한 자본주의 개혁”을 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권력기구를 세우는 대안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안철환 씨는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는 주장이 “국가에 맞선 정치 투쟁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과 연결”되기보다는 “정치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으로 연결”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던졌다.

나는 두 방향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주의가 강한 경향은 국가는 총자본의 반영물이므로 진정한 힘을 가진 자본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또 국가에 대해 같은 개념을 쓰면서도 국가에 맞선 정치 투쟁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국가에 맞선 정치 투쟁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라고 쓴 문장은 노동조합주의적인 경향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안철환 씨는 내가 스탈린주의 일반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정선영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금속노조가 화물연대의 바통을 이어 받아 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올 여름 노동자 투쟁의 돌파구를 얻 것은 단연 화물연대 파업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물류 운송물이 반토막 났고, 당황한 정부와 우파는 '투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서둘러 일부 양보 조치를 내놓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도 심화했다. "영일대군" 이상득의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려던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하면서 그 책임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 등 금속노조는 7월 13일과 20일에 주·야 4시간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매각 등으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한 금융노조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이미 올해 상반기 노동손실일수는 2008년 이후 최대치인 26만 4천 일을 넘어섰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그 수준은 불균등하고 아직 충분치는 않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지금이 노동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김성희 교수)는 말은 일리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자동차·부품사들이 누린 호황도 금속 노동자들에게 호조권으로 작용하고 있다.



6·28 민주노총 경고 파업 결의대회 현대차·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이 "한몸처럼 싸우자"

금속노조 소속 주요 노조들의 분위기는 확실히 예년과는 다른 듯하다.

최근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한국GM지부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이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지부도 3일부터 2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재계와 조중동은 벌써부터 "불법행동 엄단" 운운하며 비난을 시작했다. 경총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외 신인도 하락, 투자 위축 등 어려움을 배가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지불 어려움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미 부품사 사장들이 노조에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데서 보듯, 저들은 충분히 지불 여력이 있다.

금속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심야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오랜 열망이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8백50만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이번 투쟁에 걸린 판돈은 크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핵심 작업장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공동 투쟁을 결의한 것은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서 두 작업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와 조직력으로 볼 때, 현대·기아차의 투쟁은 올해 투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그룹 사측은 이런 가능성을 피하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일단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늦추면서 임금이나 단체협상 양보를 이용해 달래며 한 곳을 떨어낼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문제를 분리 대응해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분리시키려 할 것이다. 이미 사측은 2년 미만 비정규직을 공격하며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동 투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벌이느냐, 현대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투쟁을 어떻게 결합해 벌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활동가들은 금속노조 투쟁의 전진을 위해 단결과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현대차의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연대에 나선 것처럼 말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은 올해 노동자 투쟁의 방향과 민주노총 파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장 잘 조직돼 있고 조건도 상대적으로 나은 금속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때,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투쟁의 승리와 전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극단의 시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 찾기

맑시즘 2012 MARXISM

7월26일(목)~29일(일) 장소:고려대학교 주최:노동자 연대 다함께

“마르크시즘의 귀환” (〈한겨레〉 7월 5일자)

“왜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떠오르는가” (〈가디언〉 7월 4일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 ▶ 누가 부를 만들어 내는가
- ▶ 자본주의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마르크스주의 고전들

- ▶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 ▶ 레닌의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

마르크스의 방법

- ▶ 역사유물론
- ▶ 변증법
- ▶ 소외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경제 위기와 지정학
- ▶ 국가란 무엇인가?
- ▶ 생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20세기 혁명들에서 배우다

- ▶ 1917년 러시아 혁명 —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 혁명
- ▶ 1918~1923년 독일 혁명 — 패배한 혁명의 교훈



지금! 참가 신청하세요

참가비 : 하루 13,000원 (26일만 9,000원) / 나흘 40,000원

대학생 할인 : 하루 11,000원 (26일만 7,000원) / 나흘 30,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할인

: 하루 5,000원 (26일만 3,000원) / 나흘 15,000원

15%

단체 할인 : 학생회, 노동조합, 동아리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나흘 티켓에 한해 15%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할인가 34,000원 / 대학생 25,500원 /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12,5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휴대 전화 :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marxismTwit](https://twitter.com/marxismTwit)

facebook

<http://www.facebook.com/marxism.or.kr>



▶ 아이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수십 명의 연사들과 흥미진진한 수십 개 주제들을 확인하세요.